

연희동 복합용도건물 관련 안내말씀

-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 여러분의 우려와 걱정
깊이 공감하고,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
기울여 왔습니다.

- 우선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관계자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
설득, 토지주·건축주와의 면담을 수차례 실시하였으며, 건
축허가 취소가능여부에 대한 대책회의도 수회 진행, 법률자
문을 받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.

- 또한, 지난 연말에는 이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
마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예산확보를 서울
시로부터 완료하였으며, 금년 3월 내 관련 용역을 발주
할 예정에 있습니다.

- 다만,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해당 건물
‘신축건물로 인한 교통체증은 예상되나, 교통법규 등의 엄격한
적용으로 해결가능한 범위’ 라는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적 판단으
로 인하여 허가취소에 대한 결단은 내리지 못하는 실정이며,
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

□ 서대문구청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.

○ 우선 가장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대형버스 등 진출입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유발, 보행안전 위협문제는 해당 연희동 복합용도 건물에 대하여는 토지주·건축주와의 면담을 통해 타 용도(주거시설 등)로의 전환을 요구한 바 있으며, 현재 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.

앞으로도, 주민들의 요청과 연희동 일대 원활한 교통흐름에 합당하고,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본 공사의 착공을 제한할 예정이며, 부득이 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를 반려하고자 합니다.

○ 이와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연희동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주거환경, 학습권, 교통체계 등 주민들의 생활권을 최대한 반영할 것입니다.

○ 또한, 제도·정책적 차원에서도 현재 건축법상 「백화점 등 일정 규모 이상 건물허가 시에만 ‘교통영향평가’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항」에 대해서도, 주변 학교시설, 주민 주거생활권과

상당한 연관이 있을 시에는 건축허가 전 사업계획서 제출, 주민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갈등예방, 상생에 관한 절차마련을 상부기관 등에 적극 제안·건의하고자 합니다.

※ 해당 연희동 복합건물의 경우 현재 건축법상 '사업계획서 제출'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근거가 없는 사안임.

- 아울러 서대문구청에서는 연희동 일대 교통체증과 사고우려, 학습권 침해 등의 주요사항이 주민 여러분의 숙원사항임을 염두에 두고 연희동 복합용도 건물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토지주 등과 지속적인 상담과 설득을 해나가겠습니다.